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12일)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 16일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서 인사말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조계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

설정 스님 불명에 퇴진 기로 서다

중앙종회 제211회 임시회서… 찬성 56표로 '불신임'

설정 스님 "사퇴 연기" 호소
의혹 해소 가능성 낮아지며
종단 대중 피로감 누적된 듯

원로회의 22일 인준관련 논의
인준 시 원장 자격 즉시 상실
60일 내 차기 선거 준비해야

글= 윤호섭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불신임안 인준절차가 남았지만 설정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총무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8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제211회 임시회를 개원, 첫 안건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다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6, 반대 14, 무효 1표로 가결 정족수인 50표(재적의원 3분의2)를 넘어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4명의 종회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즉각 사퇴 불가" 밝힌 설정 스님

설정 스님은 앞서 '중앙종회 임시회 전 사퇴' 뜻을 간접적으로 밝혀오다가 8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31일 사퇴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종단 내부의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견제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퇴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해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견제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어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종단개혁의 초석만은 마련하고, 올해 12월 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총무원장 진퇴와 관련된 조계종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결국 설정 스님은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시회 당일 설정 스님은 "저는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 불신임 사유가 종단 위상에 걸맞은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 당시 회의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종회 부의장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불신임은)초유의 사태다. 이 때문에 가결 당시 침울한 기운이 돌았다. 다만 종단 정상화를 열망하는 종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종회 분위기를 전했다.

불신임안 가결은 설정 스님이 종단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해 이뤄진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자의혹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MBC PD수첩 등 공중파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져 종단 위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 설정 스님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결백만을 주장해 종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구본사주지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임에도 종단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의혹 해소를 위한 유전자검사는 요원한 일이 됐다"며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지해준 종도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로회의 인준절차 남아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대중의 이목은 8월 22일 소집되는 원로회의에 쏠린다. 이날 원로회의는 중앙종회가 가결한 불신임안 인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원로회의 인준은 재적의원(23명) 과반수이상 동의해야 가능하다. 불신임안이 인준되면 설정 스님은 그 즉시 총무원장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종정 교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성명, 중앙종회 결의 등 종단 중진 인사들의 입장이 설정 스님 사퇴에 방점을 찍고 있어 원로회의의 인준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10인의 원로의원들이 지난 7월 27일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자격을 상실하면 종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궐위 60일 내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까지 권한대행은 총무부장이 맡는다. 이와 관련해 설정 스님은 16일 오전 신임 총무부장에 진우 스님, 기획실장에 학암 스님을 임명했다. 앞서 임명된 총무부장 성문 스님은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으며, 설정 스님은 한동안 공석이던 총무부장에 기획실장이던 진우 스님을 앉혔다.

한편 중앙종회는 임시회 개원 당일 23일 예고된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5일간의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또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8월 15일 회의를 통해 조계사, 총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려대회 당일 '종정 교시 준수 결의대회' 등과 같은 맞불법회 성격의 행사를 봉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강제징용 희생자, 국민 품에서 쉬소서"

유해봉환위, 광복절 맞아
유해 환국·광화문서 추모제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의 유해 35위가 국내로 돌아왔다.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가 구성한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 대전 광수사 주지)는 8월 15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14일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온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에 대한 국민추모제를 진행했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서 열린 국민추모제에서 대표자들이 유해 봉안 전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일본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해 봉안과 헌화, 7대종교 추모의식 등으로 이뤄졌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은 "일제강제징용 희생자의 유해 봉환은 당시 상처를 치유하고 남아 있는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며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두 환국하는 날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유해봉환위원회는 8월 16일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 유해 35위를 안치했다.

노덕현 기자

고양시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동참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7개 센터서 진행

본지와 불교환경연대가 전개하는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고양시가 동참키로 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고양시 산하 기구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광기)는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해당 캠페인은 텀블러 사용을 독려해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양시 측은 거점센터 6곳과 주엽커뮤니티센터를 통해 텀블러 나눔을 진행한다. 홍보채널로는 고양시 SNS와 웹자보,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한다. 또한 고양시가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서도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전용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신문도 캠페인 관련 소식을 전하며 협력키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서 일회용품 안 쓰기 서약을 한 뒤,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면 텀블러를 기부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 기부장소는 덕양구 △덕양구청 △행신2동행정복지센터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일산구 △일산동구청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문화의 집 그리고 주엽커뮤니티센터 등 7개소가 선정됐다. 센터별 운영 시간과 세부 장소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y1365.or.kr) 내 공지사항서 확인할 수 있다. (031)906-1365

김지원 수습기자

종단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종단적, 비승가적 승려대회의 조계사 개최를 불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입니다.

특히 조계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서울 시민들에게는 종교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힐링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나아가 십만이 넘는 조계사 신도들에게는 붓다로 살기를 발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기도공간이자 소중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칭 승려대회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준비한다는 분들이 대회장소로 조계사를 지칭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조계사와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지속적으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했던 일부의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는 금번 반종단적, 비승가적 자칭 승려대회라는 집회에 대하여 조계사 사부대중은 단호히 반대하며, 특히 종단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예하께서는 종헌종법 준수를 강조하시며 "이제 사부대중은 시시비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과 용서로써 수행본분으로 돌아가 대화합의 장에서 다함께 중지를 모아 불교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셨습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께서도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승려대회는 종헌질서를 무너뜨리고 종단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은 신성한 기도도량이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양산하는 반종단적, 비승가적 자칭 승려대회라는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불허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종정예하의 교시를 봉대하고 종단운영의 근간인 종헌종법 질서가 반드시 준수되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추호의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불기 2562년 8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